

세계 농촌지도자들 전북에 온다

세계농촌지도포럼, 오늘부터 25일까지 농진청과 전북도 일원서... 농업 현장 시찰 당초 송도 개최 예정이었으나 전북도, 농진청이 혁신도시 입지한 점 들어 유치 요청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GFRAS)’이 22일부터 25일까지 세계 60여개국 400명의 농촌지도 관계자들이 모이는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난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번째를 맞는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은 지역, 소지역 및 국가 수준의 농촌지도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세계농촌전문가들의 연례 국제회의이다.

포럼의 목적은 농업인의 현재 고민과 도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농업인의 소득수준과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은 ‘효과적인 농촌지도 파트너십 증진과 도전과제 해결 및 기회포착’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적인 현장 경험 공유,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필요한 역량 증진과 지속가

능한 농촌지도사업의 개발의 세가지 목표로 회의가 진행된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이 전북에서 개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에 입지한 점을 들어 전북도에서 전북도내 유치를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초 제9회 세계농촌지도포럼 본부(스위스 로잔)측에서는 국제회의장시설, 교통·편의시설과 공학접근성을 이유로 인천 송도를 1순위로 내부 결

정된 바 있었으나, 전라북도의 긴급 요청과 설득으로 도내 소재 농촌진흥청으로 최종 유치 확정된 것이다.

본 포럼에 참석한 400명의 참가자들은 4~5일동안 도내에서 숙박 및 식사는 물론 한옥마을과 새만금현장을 방문하며, 도내 농업관련 사업현장을 5개 코스로 나누어 시찰한다.

도 관계자는 “세계 60개국 4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국제행사유치로 새만금 및 농생명 수도로서의 전북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인원 약 2,000명 체류로 숙박, 음식, 관광 등 전북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문정인 특보 “5·24 조치 해제 미국 ‘승인’ 필요치 않아”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와 관련 미국의 승인(approval)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문 특보는 최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과 관련 “협의와 동의 없이 안 할 것이라는 정도가 적당하다”며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상당히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내용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에 발이 묶여 버리면 모든 교류 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며 일정 부분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특보는 “5·24조치 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는 것들인 대북 교역, 직접투자 등은 못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겹치기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머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허용되는 것들인 민간 교류 등은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양 정상회담 직전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과 관련 “중요한 건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소관 이므로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한다는 점”이라며 “유엔사와 미국 간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사안이다”라고 못박았다. /뉴시스



전북대가 현재 건립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의 스마트 강의실인 ‘송은학당’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가졌다.

전북대, 신축 법전원 한옥동에 ‘송은학당’ 개관

故곽봉덕 여사 기부금으로 73석 스마트강의실 조성

전북대가 현재 건립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한옥동의 스마트 강의실인 ‘송은학당’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가졌다.

2017년 6월 착공한 송은학당은 189㎡에 73석 규모의 스마트 강의실로, 지난해 5월 작고한 고평석덕 여사가 후학 양성을 위해 세달라며 기부한 3억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중 일부로 만든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강의실은 앞으로 각종 세미나를 비롯한 대규모 회의, 토론형 수업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부자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개관식에서는 전북대 김재민 총장직무대리를 비롯한 분부

보직자 및 학부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고평 여사의 고귀한 행적을 기리기 위한 현판을 제막했다.

전북 장수 출신인 고평석덕 여사는 평소 정도(正道)로써 자녀들에게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사와 공부의 미루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꼭 주고 싶어 했다.

평소 신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 고평 여사는 지난해 초 대학에 기탁 의사를 밝혔고, 약정서 작성까지 마쳤으나 5월 작고했다. 이후 자녀들이 어머니의 평소 신념을 전하기 위해 3억 1천만 원의 발전기금

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고인은 2011년 작고한 부군인 송은(松隱) 안희수 선생을 후학들이 영원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법전원 한옥동에 건립된 스마트 강의실을 ‘송은학당’으로 명명했다.

김재민 전북대 총장직무대리는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의 첫 작품인 송은학당이 고평석덕 여사님과 부군인 안희수 선생님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게 됐다”며 “송은 선생님 가족분들의 후학 양성에 대한 뜻을 이어받아 송은학당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 쇄도

“사립유치원 횡포로부터 아이 보호해야” 청와대 청원 잇따라

국가가 나서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비리 뿐 아니라 휴업이나 폐업 등 사립유치원의 집단 횡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전면 확대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게시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현재 국·공립 유치원 전면 확대와 관련한 국민청원 19건이 올라와 있으며, 한 청원글에는 1330명이 동의했다.

이번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했던 경기도 화성군 동탄의 유치원 학부모들도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단설 유치원 설립을 요구했다.

집, 3~5세는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학부모 만족도는 천차만별이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단연 국·공립 유치원이다. 국가 지원을 받아 학부모의 납입비 부담이 적고 운영도 투명한 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5%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운 것도 유아 시기부터 대학교육까지 차별 없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2600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497개다.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국공립이 사립보다 수적으로도 더... 수용률 25% 불과
국공립 신·증설시 예산이 중요... 사립 반발 무마 관건
문 정부, 국공립 수용률 25에서 40% 확대 목표

▲국·공립 유치원, 수는 많이도 수용률은 사립의 4분의 1 수준
현재 수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사립유치원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국정과제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유치원 9029개 중 국·공립은 4747개(52.6%), 사립은 4282개(47.4%)다. 유치원 수만 보면 국·공립이 절반 이상이지만 실제 원아 수용률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국·공립 유치원은 기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남은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치원 수는 많이도 수용률이 낮은 것이다.
원아 수요가 적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이 많은 외곽에 주로 위치했다는 점도 취원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다. 원아 수요가 많은 대도시의 대다수가 사립유치원이다.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 사립보다 높아
현재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

▲예산 확보 및 사립유치원 반대 무마가 관건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가 5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때 드는 예산은 약 5조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원을 추진하는 매향형 공립유치원도 서울 부지와 건물 단가를 고려하면 한 곳을 매입할 때마다 1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한유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전문가들 “교육 당국 더 강한 의지 필요”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국·공립 유치원과 관련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이런 속도라면 10억원씩 들여서 국·공립 유치원을 세워도 원아수용률 40%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도시의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이나 통학버스 지원 등 접근성을 우선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